

# 한일 양국에 있어 서로 엇갈리는 ‘근대 국민주체’ 세우기에 관한 문제 (전편)

— 한국의 ‘식민지 근대화’에 관한 역사학, 사회학 및 정치학계의 연구동향의 검토와 연구 경향의 주요논점 —  
노나카 히로시 (野中 洋志)

## The problems about buildings the ‘modern nation-subjectivities’ in both Korea and Japan which have a conflict between the two (the first part)

- Reviews and analyses of recent tendencies of research and main issues of the tendencies which are discussed in historical, sociological and political societies -

Hiroshi NONAKA

### Abstract

This paper is a first part of the work, which aims to discuss the problems of the formations of ‘modern nation subjectiv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is first half, we are going to review and to analyze the important factors which cause contradictions of the recognition of modern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whose each process of modern state building was connected with each other very closely

### Key-words

modern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ormations of ‘modern nation-subjectivity’

## I. 서론 -문제의 소재와 목적

### (1) 한일 양국의 근대화 과정을 둘러싼 문제

#### -1. 일본 명치시대부터 제2차세계대전 패전까지

한국<sup>(1)</sup>과 일본 사이에 있어 근대 시대에 들어선 후의 역사는 복잡하게 얽혀진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것은 명치 시대에 이르러 일본이 근대 국가를 건설해 가는 데에 있어, 근대화를 선행 시동한 나라로서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근대화 시켜 가느냐는 문제도 역시 한 덩어리가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sup>(2)</sup> 달리 말해 보자. 1894년에 벌어진 청일전쟁부터 시작되고 노일전쟁을 거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일제 강점기” 즉 식민지 지배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간접 직접적으로 한국에 대해 지배 관계를 맺었다. 그 한편으로 그런 시기 전부터 일본의 근대화 기도는 바로 한국의 근대화를 자신의 근대화 문제과 포리일체의 문제로 삼아 그것에 끼어들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셈이다.<sup>(3)</sup>

이런 역사적인 사태가 지니는 관계 구조는 일본 근대 사상 측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본 근대 계몽사상을 세운 자라고 할 수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을 보면 위에서 살펴본 사태를 밑에서받치는 논리가 구조화되어 있다고 한다.<sup>(4)</sup> 그의 사상의 뜻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연구로 바로 “탈아입구脫亞入歐”를 들 수 있겠는데 그 뜻을 단순히 중국이나 한국 같은 “반개半開” 단계에 머무르는 동아시아 나라들과의 관계를 사절하여 거기 벗어나고 서양문명 축으로 자리를 바꾼다는 식으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탈아입구론의 밑에는 그것을 받치는 근거로서 “문명”과 “반개” 내지 “야망” 같은 후쿠자와 사상이 초기부터 가지는 분할구별 논리가 내재되었으며, 이 내재논리는 그 자체가 우월한 문명에 의한 정제된 반개나 야망에 대한 지배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봤듯이 후쿠자와가 탈아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뒤 시기의 역사 사태는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한국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배한 시기다. 이것은 제국주의 지배 형태로 일본의 근대가 한국의 근대와 어디까지나 관계를 맺으며 일본 근대화 과정은 일국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사상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직접 간접의 현실적 지배는 일본 근대가 지배 관계가 실제로 생길 이전부터 한국에 대한 우월성이라는 사상적 지배관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의 귀결이라는 일단을 보여 주는 셈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요네 타니(2006)가 지적하듯이 탈아론 이전의 사상 경향, 즉 “흥아론” 입장 때에 이미 그 근간에는 탈아론과 딱 갈라 나눌 수 없이 시종일관해서 변함없는 한국에 대한 지배적 시각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한국과 연대하며 그 근대화를 도와 주는 데 있어 문명개화된 아세아의 명주로서 한국을 근대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개입하겠다는 지배적인 시각이 처음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 -2. 제2차세계대전 끝난 후

이렇듯이 지배와 피지배라는 비대칭적 관계를 내포하면서 복잡히 얽혀진 한일 양국의 근대역사가 거꾸로 딱 갈라져서 서로 엇갈리는 양상을 띠게 된 것이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그로 인해 한국이 해방된 1945년 이후의 이른바 “전후” 시대이다. 전후 시대가 복잡하게 얽혀진 근대의 한일 양국 역사를 서로 분리된 것으로 갈라 낸 것에는 시대가 지니는 구조적인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지역 질서를 재편한 냉전 체제가 가져 온 것이다<sup>(5)</sup>. 한국 통치권은 한국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독립운동세력에게서 통치기구를 되찾아 접수한 식민지배 기구인 조선 총독부가 그것을 미국 점령군에 넘겨주면서 식민권력과 미군 양자가 제휴하는 식으로 좌파 세력을 억눌러 결국은 “친미 반공 국가”가 성립되었다<sup>(6)</sup>. 그리 되면서 원래 지배국과 피지배국 양국이 심한 고통의 과정을 겪고 얻게 될 탈식민화는 반공 정책을 깎긴하게 여기는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서 “일본의 모습이 후경으로 물러나며” 한국이 “냉정체제 대립의 주된 전쟁터”가 됨으로써 “식민지시대의 친일파 세력이 그 체제에 중핵에 남겨져 군사독재정권<sup>(7)</sup>”의 성립에 이어져 갔다.

일본도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 의한 점령정책이 시행되면서 일찍이 제국으로 확대된 영역이 “보다 상의의 권력과의 종속적인 컬라버레이션(collaboration)을 통해서” “에스닉한 ethnic ‘일본인’ = ‘일본국민’ 과 꼭 부합할 ‘단일민족적인’ 국민국가로 수축되어” 갔다.<sup>(8)</sup> 그럼으로써 직전 시기만 해도 신민지 제국이었던 기억이 싹 지워진 상태가 되고 만 셈이며 “점차 고도성장기에 들어가면서” “독립 후에도 혼란이나 분열 같은 사태를 품고 저개발 상태를 억눌러 고통에 시달리는 아세아의 동향과 점점 괴리되어 갔다”<sup>(9)</sup>

## -3. 현재 한일 양국에서 근대역사 인식을 둘러싼 문제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한국의 근현대사 연구는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합리화하기 위하여 한민족에 대하여 강요된 ‘식민사관’ 을 극복을 하는 데 최대한의 안목을 두었고”, “역사연구를 통한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되찾는 것이 지상적 과제로 하였다.” “따라서 자국사로서 한국사의 시작은 민족의식을 주입하는 것으로 인한 국가 정립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sup>(10)</sup>

그러한 연구 동향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주장되기 시작한 것이 냉정시대가 끝나가는 시기였다. 1980년대 후반 경제사학계 일각에서 역사학계가 가져오던 기존의 식민지 인식을 비판한 이후, 1990년대 후반 식민지 근대화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다(배 성준, 2000). 그 논쟁은 수탈/저항이라는 이분법식의 인식구조에 바탕을 두고 신민사관을 비판하는 민족주의적 시각인 “수탈론” 과, 그것에 대한 반정립(反定立)으로서의 소위 말하는 “근대화론” 이라는 식으로 조정 불가능한 듯이 날카로운 대립구도를 보였다.

식민지 수탈론은 한국 역사학계의 주된 연구 경향을 지칭하는 인식 틀이다. 내부에 몇 개 지향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체성론이라든지 타율성론이라든지 하는 일본의 식민사관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며 근대화의 동력으로서 민족운동을 주목하듯이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다. 한편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 개발에 주목하고 식민지기의 개발경험과 성과는 6, 70년대 경제발전의 역사적 기반이 되었다고 하면서 수탈론이 지니는 역사상을 부정하는 것이다.<sup>(11)</sup> 다시 말해서

1990년대 ‘식민지 근대화’ 를 둘러싼 논쟁은 경제사학계의 일각에서 ‘식민지 근대화론=경제성장론’ 이 나오면서 역사학계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수탈론의 본가’ 로<sup>(12)</sup> 몰라가는 것으로 인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시기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이러한 논쟁이 지니는 대립 구도는 일본이 명치시대에 들어간 후에 ‘제국’ 영역으로서 일본과 한국(한반도) 사이에 벌어진 ‘지배구조’ 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봤듯이 한일 양국의 서로 얽혀지던 근대 역사가 ‘전후’ 에 이르러서는 거꾸로 딱 갈라져서 엇갈리는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 갈라진 한 편인 한국 쪽에서 근대 국가의 성립 과정 문제를 둘러싸고 역사인식을 다루는 것이 재생산하는 듯이 되풀이되는 셈이라 할 수도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사회에서는 90년대에 돌아간 시기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영향으로 인해 주로 사회의 재편성이 진행되었고 재편성이 진행함에 따라 그것과 대립-보완관계가 되는 Neo-nationalism이 날뛰기 시작하기도 했다.<sup>(13)(14)</sup>

Neo-nationalism이라고 불리는 움직임은, 제국주의적 식민지배와 전쟁을 뗄 수 없는 일본 근대화 시기에 관한 인식을 미화할 수 있도록, 적어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도록 수정하려고 나선 움직임이다. 그 움직임에 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면서<sup>(15)</sup> ‘국민’ 의 역사관을 변화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운동했다.<sup>(16)(17)</sup> 그러한 90년대 중반으로부터 대두한 Neo-nationalism의 중심이 된 것은 ‘역사수정주의’ 라고 불리는 것이다.<sup>(18)(19)</sup>

이 운동을 특징짓는 것은 ‘역사의 이야기론(歴史の物語論)’ 이라는 새로운 역사인식의 틀이다. 즉, ‘국가의 정사(正史)’ 는 ‘국민의 이야기’ 이며 결코 역사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도 된다는 논리이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그것을 말하는 주체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본인이라면 일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sup>(20)</sup> 그것은 “실체론(實體論)적” 인 국민관(觀)이 아닌 “구성론적” 국민관에 입각하고<sup>(21)</sup> ‘국민’ 이라는 것이 “상상의 공동체”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역사’ 라는 것도 일

정한 시각에서 과거가 재구성된 것이라고 한다. 그럼으로써 ‘역사적 사실’ 도 역시 ‘이야기’ 하는 행위와 달리 실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어져간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근대국가가 아니던 중국이나 한국 같은 지역은 유럽에게 침략해지기 전에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됨으로써 오히려 일본인화=문명화되었다는 식으로 역사를 말할 수 있으며 전승국에 억눌린 “아세아침략” 같은 부정적 역사를 넘어가고 ‘국민의 자존심’ 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up>(22)</sup>

그렇듯이 90년대 일본에서 ‘국민’ 을 통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으로 사회를 재편하려던 때, 그것은 자국自國 중심적 역사인식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봤듯이 일본의 근대사는 제국주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하는 이웃 나라들과 맺어진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역사인식도 한 나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겠다.

#### -4. 문제로서 ‘국민’ 주체 세우기

역사적으로 근대사회를 특징 짓는 징표로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이 글 주제와 관련되는 것을 들면 ‘주권 국가의 성립’ 나아가서 국민이 주권의 원천으로 간주될 단계에 이른 ‘국민국가’ 의 성립을 들 수 있겠다.<sup>(23)</sup> 서로 갈라져 엇갈린 현재 한일 양국의 근대 인식 문제에 있어도 한편으로는 ‘국가’ 나 ‘국민’ 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는 것이 문젯거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의 국가 형성과정들 즉 양국 근대역사는 서로 뗄 수 없이 맺어진 것도 확인된다. 따라서 ‘국민’ 의 형성을 둘러싼 논리도 ‘국민’ 을 내부적으로 닫힌 역사인식과 반대로 이웃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부로 열려 가는 역사인식을 세우려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2) 목적과 논의의 전개

이 글의 목적은 한일 양국의 서로 내부적으로 닫힌 일국사적 근대사들 즉 국민 형성 과정의 관한 인식들이 지니는 문제 틀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인식 틀을 세우는 실마리를 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 전체에서는 주로 한국 쪽에서 벌어진 논쟁이나 논리를 다룰 것이다. 왜냐하면 지배와 피지배라는 비대칭 관계를 지닌 근대역사, 달리

말해서 모순 관계를 지닌 근대역사의 그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피지배의 위치에 놓인 식민지이며 그 모순의 본질을 잡고 넘어가려는 보다 날카로운 기도가 거기서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sup>(24)</sup>.

본고는 전체 글을 두편으로 나눈 중의 전편이다. 전편에서는 먼저 한국쪽 각각 학계에서 식민지시대의 근대 형성 과정에 관해 논의해 온 내용 및 그 경향을 주로 논쟁사를 되돌아보면서 정리해 볼 것이다. 각 입장에 관해서 좀더 비판적으로 논하는것으로 이어보겠다.

이어질 후 편에서는 전시기에 일본에서 일어난 근대적 지배를 비판하는 탈근대적 사상, 즉 ‘대동아 협동체론’에 대응하면서 그 영역 내부에 있어 그것을 탈구축하면서 근대적 지배-피지배 관계를 벗어날 주체에 대하여 고찰한 서인식의 사상을 검토하며 서로 엇갈리는 한일간의 역사 인식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

## II. 본론 ~각기 학계들의 연구 검토 및 평가~

### 1. -1)사회 구성체 논쟁

1980년대의 한국의 사회과학연구에 있어서 활발히 논의된 것은 한국 사회 또는 한국의 자본주의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sup>(25)</sup> 1980년대 중반의 하나의 큰 논쟁으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사회 구성체 논쟁’은 ‘식민지반봉건론’과 ‘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으로 나뉘어 전개되었는데, 식민지 시대 사회구성체 논쟁은 그런 논쟁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즉, 식민지 시대 사회 구성체 논쟁은 식민지 시기는 어떠한 사회 구성체인가를 놓고 벌인 논쟁이었고, 이 논쟁은 현재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시원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경제를 주목했고, 논쟁의 핵심은 반봉건의 문제였다.

‘식민지 반봉건론’은 식민지시대의 지주제를 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위에서 근대적 상품경제에 포섭된 지주제로서 규정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지주제가 생산관계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혁 없이 타협적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반봉건 지주제는 자본제적 농업경영으로서의 발전이 구조적으로 저지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한편 ‘자본주의론’은 토지조사 사업을 본원적 축적으로 설정하고 본원적 축적을 경과한 식민지 조선 사회는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이기 때문에 반봉건제는 본질적으로 자

본주의적인 것이라고 파악하였다. 식민지 시대 사회성격 논쟁은 ‘식민지 반봉건론’이 논리적인 면에서 자신들의 편향을 인정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되었다.<sup>(26)</sup>

### 1. -2)사회 구성체 논쟁에 관해서

“사회구성체”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Marx, Engels의 사적 유물론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부구조인 경제적 생산관계를 토대로 삼으면서 상부구조(정치나 문화와 같은 것)의 제 영역들도 포함한 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에서 80년대에 벌어진 식민지시대 사회구성체 논쟁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성격을 둘러싼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식민지의 경제적인 생산관계 토대 위에서 사회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 문제였다. 식민지시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핵심은 반봉건문제에 관한 해명이었으며, 식민지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규정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농업에서의 반봉건 문제를 중심으로 변혁 운동의 주체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점이 “사회 구성체” 문제에 치중하여, 반봉건이 자본주의적인 것이냐 봉건적인 것이냐는 이념적인 문제에 그쳤으므로 ‘한국의 식민지 반봉건’이라는 문제의 해명으로서는 형해화形骸化되고 말았다. 그러나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지켜봤던 사람 대부분은 앞으로 충실한 학문적 논증, 구체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런 점에서 정 병욱은 식민지자본주의라 한다 하더라도 반봉건 요소와 어떻게 결합되어 식민지적 특성을 빚어내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논의가 자본주의에 치중된 만큼 식민성이라는 한국적 특성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고 한다(정 병욱, 2004). 좀더 나아가 다시 말하자면 식민지적 특성을 빚어내는 식민지시대의 성격을 한국 일국사—國史로서 자본주의 발전사안으로 가두려면 안된다 싶다. 사회변동을 발전론적으로 일국 단위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국가의 사회변동의 특성이 생겨 규정된다는 세계체제론의 시각에서 근대라는 시대를 보면 어떻게? 그럴 경우에는 근대에 각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발전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전 세계에 하나 뿐인 근대의 여러 모습들이 각각 나라마다 생긴다는 것이 되겠

다. 비록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논쟁이 이념적인 면에 치중하고 말더라도 당시 세계적인 근대에 있어서 반봉건제라는 것이 어떤 접촉과 그것으로 인한 충격을<sup>(27)</sup> 받았음에 따라 생겼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2.-1) 식민지 수탈론<sup>(28)</sup>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크게 두 개의 연구 경향이 있다. 즉, 한쪽으로는 근대주의론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것이 있다<sup>(29)</sup>. 양쪽 경향들 사이에는 체제옹호와 체제변혁이란 근본적인 지향의 차이가 보이는데도, 이하에서 보듯이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틀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달리 말해서 '식민지 수탈'이라는 관점에서 역사학계의 연구 경향을 공동적으로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주의론은 국민국가의 성립이나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확산과 같은 서구적 역사경험으로부터 자본주의적 근대화라는 근대변혁의 과제를 찾아낸다. 이 과제의 주체로서 부르즈와 민족주의 세력을 자리 매기며 부르즈와 민족주의 운동에 바탕을 두고 자주적 근대변혁 과제를 풀려고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근대를 지향점으로 삼는 근대주의론 입장은 한국 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역사적인 원동력으로 민족의 내발적 힘을 들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내재적 발전론은 일국사적 발전의 기본 동력을 안으로부터 아래로부터의 계기에서 발견하고, 그 전개양상을 민족해방운동에서 찾는다는 역사인식이다. 또한 일제의 지배와 민중의 저항이라는 인식 틀이 해방 후 외세 의존적 군사독재의 지배와 민중의 대항이라는 인식구도로 이어져갔다. 이론 점에서 내재적 발전론은 민족민중운동을 뒤받치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로서 기능하였고 그럼으로써 체제 변혁적인 지향을 지니고 있다.

그리 양 쪽 간에는 근본적인 지향의 차이가 보이지만,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 양쪽 입장들은 자본주의 맹아론을 토대로 식민사관인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일제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타도하고자 하던 민족운동을 자주적 근대화의 기본동력으로 주목하였다. 그런 바탕에서 일제의 침략 만행과 야만적 수탈을 강력히 비판한다. 한편 식민지배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었

고 분단체제는 물론 정치적 파행과 경제적 종속 등은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의 작동이라는 것이다. 이 두 경향은 일반적으로 '식민지수탈론'으로 불린다. 이와 같은 근대사 상은 한국사회의 민족 자존의식과 반일주의적 정서에 기초하여 역사학계의 지배적 위치를 점해왔다.

## 2.-2)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수탈론이 전제로 하는 자생적 자본주의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sup>(30)</sup> 반면 이들은 일제에 의한 개발에 주목하고 식민지기의 개발 경험과 성과는 6, 70년대 경제발전의 역사적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 이 주장은 식민지배가 해방 후 경제적 종속과 저개발의 역사적 원인이 되었다는 식민지 수탈론의 역사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대 역사상은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불린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80년대 동아시아의 새로운 변화를 설명하려는 시도로 더 나아갔다. 이러한 시도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에서 급속히 자본주의가 발전해왔음을 맞보고 중진中進자본주의론이라는 시점을 제시했다. 이것은 신흥 공업국들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의 역사학계가 바탕으로 한 종속이론이 통용될 수 없게 되고 제3 세계도 세계 자본주의와의 관계에서 협력과 참여에 의하여 경제발전이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sup>(31)</sup>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창자라고 말할 수 있을 안 병직은 한국 근현대사는 이제 연구의 paradigm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요청되어 있다고 하고, 그 근거로서 한국의 자본주의의 발전이라는 현실과 세계사의 동향을<sup>(32)</sup>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한국 근현대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의 사회주의권의 붕괴, 동아시아 경제권의 급속한 성장, 특히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보면 이제는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은 중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길밖에 없다고 본다. 그것은 바로 경제발전이라는 시각으로 조선 말, 식민지시대, 해방 후의 역사를 일관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사에는 물론 정체停滯라든지 수탈이라든지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겠는데 거꾸로 하면 식민지에는 수탈뿐이 아니라 개발의 측면도 역시 있었다는 것이다. 내재적 발전론의 시각에서부터의 역사 연구는 식민지 시대를 수탈이

라는 한 편에만 치우쳐 보면서, 민족주의를 선동하여 민족독립운동사의 측면만을 강조하기 쉽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제야말로 식민지시대를 경제발전론의 시각에서부터 연구하는 것이 요청되어 있다고 주장된다.

이 입장은 동아시아의 신흥 공업국가들이 출현했음에 바탕을 두고 이론화되며 일제의 식민지배를 거친 한국과 대만이 바로 이 신흥 공업국가들의 전형이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론으로서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강화되었다.

### 2-3)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에 관해서

한국 근대사 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논쟁의 각각 입장의 식민지시대 인식은 서로 상이하며 대립적이다. 따라서 “수탈이나 개발이나” 하는 쟁점은 양자의 상이한 인식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주의의 강력한 세례를 받고 자란 한국 20세기의 학문 풍토 속에서 일본지배하의 자본주의를 발전을 위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현대 한국의 고도성장과 연결시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해석은 충격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런 해석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정서적으로 거부’ 되었다(고 석규, 2002). 다시 말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창자인 안병직의 논의는 한국 근대사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자본주의 발전의 측면을 과도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자이자 대표적인 ‘수탈론자’로서 인지되는 신용하는 그러한 논의들을 조선인의 ‘정체성’, ‘타율성’을 강조한 일제의 ‘식민사관’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한국의 경제성장의 기원을 일제의 식민통치에 구하며 민족주의를 굴복시켜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감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33) 그러한 대응에 대해 식민지근대화론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족주의라는 장벽을 부수는 일이 아닌가 싶다. 예컨대 안병직은 “근현대사연구”는 ‘민족정기’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과학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민족을 버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4)

이런 까닭으로 인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쟁은 민족주의 문제로 이어진다. (35) 원래 민족주의는 물론, 민족의식이라든지 민족사관이라든지 하는 말은 명확한 이론적, 개념적 실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측면을

강하게 지닌다. (36) 식민지시대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민족해방운동을 뒤받치는 선물이었는데도 식민지시대의 종언이 다가옴에 따라 민족주의 ‘우파’가 적지 않게 ‘친일파’가 되고 ‘해방’ 후 그것에 대한 ‘청산’이 거의 행해지지 않은 채로 민족주의는 반공독재정부를 뒤받치는 ‘국가 민족주의’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윤해동, 2003) (37) 그래서 민족주의를 굳게 견지하려는 시각은 한국 역사의 객관적 조건에 딱 맞게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전체를 배타적인 방향으로 잘못 이끌어갈 위험성도 있을 수도 있다 싶다. (38)

### Ⅲ. 맺으면서 수탈/근대화 대립구도를 넘어서려는 시점.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에 관한 평가와 아울러~

90년대의 식민지근대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식민지근대성’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성과 식민지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39)

제국주의/식민지주의의 역사를 지구규모의 질서속에서의 상호연관성 차원에서 상대화시키면서 당시에 복잡하게 뒤얽힌 권력에 대해 주목하는 post-colonialism (40)의 시점은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한 인식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지배/저항’, ‘친일/반일’과 같은 이분법으로는 풀릴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체제를 지배자의 일방통행적 지배에 인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배 역할을 지게 된 식민지배 층을 ‘친일파’로서만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 지배와 피지배를 상호작용으로서 인지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식 틀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41)

위에서 본 수탈/개발과 같은 대립은 식민지의 각기 서로 다른 측면을 보고 있음에 불과하고 서로 배제하는 관계를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하겠다. 즉, 조석곤(1997)이 말하듯이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문제의식은 모두 정당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비판에 몰두하고, 오히려 역사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한 눈에는 대립되어 보이는 논의도 실은 동일한 인식구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도 생겨

있다. 그러한 지적은 상기 두 입장들은 다 “민족주의적 근대화” 라는 것을 역사의 보편적 지표로 한다고 본다.<sup>(42)</sup> 그리고 그러한 논쟁의 쟁점이 식민지 지배의 정치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고 정신적 동원에 의한 식민지적 주체의 내면적 갈등 같은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도 그 한계로서 들고 있다.<sup>(43)</sup>

그러한 연구들은 ‘근대화론’ 을 경제사적인 개발론으로서의 ‘식민지근대화론’ 으로부터 새로운 ‘식민지적 근대성론’ 으로 전환하는 시도로서 자리매김 수 있는 것 같다. 즉, ‘민족’ 이나 ‘근대’ 를 분석의 대상으로 상대화시키며 그 내적 실정實情을 구명하려는 시점을 가져왔다고 하겠다. 계몽이나 해방 같은 말로써 나타내는 근대(‘지향으로서의 근대성’)가 아닌 지배나 권력으로 규정된 ‘근대’(‘실정으로서의 근대’<sup>(44)</sup>)를 문제로 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시점은 국가 간의 경계선을 넘어서 서로 상호침투를 하는 상관성 안에서 식민주의를 더 깊이 다시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싶다.

종래는 식민주의의 문제는 제국주의와 그것에 저항하는 ‘민족의 발전’과 같은 틀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민족의 내재적 발전’으로 인한 민족주의적인 독립의 요구가 탈식민지화를 구하는 요구로 인지되어 온 셈이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의 저항이라는 민족주의적인 대항관계의 틀은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중요한 틀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역사>의 탐구는 지배와 피지배과 같은 이항대립 구도를 넘어서 서로 상호침투를 하는 관계성 안에서 총중적으로 형성된 식민주의의 억압 구도를 밝히고 있다.<sup>(45)</sup> 그러한 연구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을 해방 후까지 이어진 문제로서 더 깊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해 가는 지평을 여는 것이 될 거라고 하겠다.

이 글에 이어질 후편에서는 서로 상호침투된 ‘(근대적) 국민 주체’의 형성 문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특히 그것의 사상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술했듯이 역사적으로 근대사회를 특징 짓는 징표의 하나로서 국민 국가의 성립이 있는데, 국민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바로 상호침투하면서도 그런 사태를 가리고 이항대립적 형상을 드러나게 만드는 근대 시대의 모순적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국민’이란 어디까지나 다자(다른 국가의 국민)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sup>(46)</sup> 그 개념에는 국민이라고 불리는 대상들을 한 국가 내부로 닫힌 존재로 보여 주게 만들 힘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민주의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하는 표현으로 해석되는 ‘내셔널리즘’을 자아내는 데에 있어서는 ‘국가간 체제’ 안에 생기는 지배-피지배관계가 큰 변수로 작용된다. 윌러스틴(2013)<sup>(47)</sup>에 의하면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이루어지는 ‘국가간 체제’는 중심, 반주변부, 주변부로 나뉘며, 이 체제 안에서 내셔널리즘, 즉 민족주의 혹은 국민주의는 중심부 국가들에 지배에 대한 대항운동으로서 생긴다고 한다. 객주23에서 언급한 헤겔(1807)이 논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따라 생각한다면 일본과의 관계성에 있어 피지배의 위치에 서게 된 근대 한국의 ‘국민’의식을 둘러싼 이슈에야 지배-피지배라는 불균등한 관계가 지닐 모순이 두드러지게 현상할 것이다.

지배관계로 인한 모순을 지녀 생긴 그런 ‘국민’의식을 둘러싼 현상은 이진경(2006)이 지적하는바, 서로 얽혀진 한일 양국의 근대 역사에 있어 협동이나 연대가 호소될 때 눈뜨이도록 겉으로 부각된다고 한다. 그는 윌러스틴의 세계체제론적 시각과 같이 제국주의가 (저항적) 민족주의의 탄생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면서, 침략하는 지배자가 피지배자인 상대방에게 연대하자고 손을 잡으려고 손내미는 것에 대해 지배당하는 자가 피지배자임에도 응답하려는 영위가 지닌 불가능성<sup>(48)</sup>이아말로 ‘국민’의식을 탄생시키는 제국주의의 역설의 극점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제국주의의 역설의 극점, 달리 말해 ‘국민’의식이 지닌 모순이 한일 양국의 근대 역사에 있어 드러난 것이 말할 바 없이 1930년대 후반에 들러 일본에서 제시된 이른바 ‘대동아’<sup>(49)</sup> 담론이다. 이 담론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평가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 한 측면으로 자본주의라든지 국민국가라든지 근대사회를 특징짓는 지표를 비판하고 넘어가려는 성격을 담아 있다. 그렇다면 피지배자의 위치에서 대동아 담론 즉 근대 ‘국민’주의의 모순을 해거하려는 사상에 응답하려는 영위에는 한 층 더 그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 내희, '한국 근대성의 문제와 탈근대화' *"문화과학"* 22호, 2000, 여름호
- 동인,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과 충격의 번역', *"문화과학"* 31호, 2002, 가을호
- 강 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 개정 본, 창작과 비평사, 1994
- 고 석규, '다시 생각하는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과 민족주의', *"문화과학"* 31호, 2002, 가을호
- 김 동춘, '한국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창작과 비평사, 1997
- 김 진균. 정 근식, 편저, "근대주체와 식민지규율권력", 문학과 과학사, 1997
- 박 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대, 2000
- 배 선준, '식민지 근대화 논쟁의 한계 지점에 서서', *"당대비평"* 13호, 2002 겨울호
-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 이론적 분석", 세길, 1991
- 신 옹하, '일제식민지근대화론 비판', 문학과 지성사, 1998
- 안 병직,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창작과 비평"* 99호, 1997 겨울
- 안 병직, 나카무라 사토루, "근대 조선공업화의 연구 : 1930~1945년", 일조각, 1993
- 양 원태, '한국 자본주의의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쟁점', *"현실 과학"* 9호, 1991
- 윤 해동, "식민지 시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 이 영호,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 연구" (152), 한국사 연구회, 2011
- 이 윤갑, '일제하 사회성격론',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1998
- 이 진경, '식민지 인민은 말할 수 있는가?: '동아신질서론' 과 조선의 지식인', "사회와 역사" 제 71집, 한국사회사학회, 2006
- 임 대식, '종속적 근대화와 민족 문제', *"역사문제연구"* 4호, 2000
- 임 지현, '전지구적 근대성' 과 만족주의', *"역사문제연구"* 4호, 2000
- 정 병욱, '한국사학의 근대성과 식민지 근대', 한국민족사상연구소 강연회 발표문, 2004 9.23
- 정 연태,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 "창작과 비평", 1999 봄호
- 정 태현, '최근의 식민지 시대 사회구성체론의 대한 연구사적 검토', *"역사비평"* 1987 가을호
- 조 대엽, '정치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쟁점', "사회학 연구의 50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원 편, 2004
- 조 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 식민지시대의 재인식', *"창작과 비평"* 96호, 1997
- 동인,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재검토', *"동향과 전망"*, 1998, 여름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해와 비판" 백산서당, 2004
- 가라타니 코진(柄谷行人), "世界共和国へ", 岩波書店, 2006,
- 동인, "世界史の構造", 岩波書店, 2010
- 강 상중 (姜尚中), "オリエンタリズムの彼方に", 岩波書店, 1996
- 동인, "ナショナリズム", 岩波書店, 2000
- 동인, 사이토 준이치(齋藤純一), 스키타 아쓰시(杉田敦), 다카하시 테쓰야(高橋哲哉), "思考をひらく", 岩波書店, 2002
- 나미키 마사토(並木真人), '植民地期朝鮮政治・社会史研究に関する試論', "朝鮮文化研究" 6号, 東京大学文学部朝鮮文化研究室,
- 나카노 토시오(中野敏男), '戦後を問うということ「責任」への問い、「主体」への問い"現代思想7月臨時増刊', 青土社, 2001
- 니시오 칸지/후지오카 노부카츠 (西尾幹二/藤岡信勝), "国民の油断", PHP, 1996
- 다카하시 테쓰야 (高橋哲哉), "戦後責任論", 講談社, 1999
- 동인 "歴史/修正主義", 岩波書店, 2001
- 모토하시 테쓰야(本橋哲也), "オリエンタリズム", 岩波書店, 2005
- 문 경수(文京洙), "新・韓国現代史", 岩波書店, 2015
- 사카모토 타카오 (坂本多加雄), "歴史教育を考える", PHP, 1998
- 야스카와 히사노스케 (安川寿之輔), "福沢諭吉のアジア認識", 高文研, 2000
- 요네타니 마사후미 (米谷匡史) 7シ 7/日本", 岩波書店, 2006
- 요시미 슌야 (吉見俊哉)편, "カルチュラル. スタディーズ (cultural studies)", 講談社, 2001
- 우에노 토시아/모우리 요시타카 (上野俊哉/毛利嘉孝), "カルチュラル. スタディーズ入門(cultural studies 입문)", 筑

摩書房, 2000

윤 건차 (尹健次), “現代韓國の思想”, 岩波書店, 2000

동인, “ソウルでかんがえたこと”, 平凡社, 2003

이치노카와 야스타카(市野川容孝) ·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 모리나카 타카야키(守中高明) · 요네타니 마사후미(米谷匡史), “変成する思考”, 岩波書店, 2005

윌러스틴(ウォーラスティン), “世界システム I, II”, 名古屋大学出版会, 2013

Shin, Gi-wook and Robinson, M. eds., Colonial Modernity in Korea, Harverd, 1999

<附記、及び謝辞> 本稿の本論(本론)の一部分は、高麗大学大学院碩士課程の総合試験종합시험(課程修了試験)にて、同校社会学科の趙大燁教授出題の論述試験に解答したさい作成した文章に加筆したものである。又、韓国語の表記、及び表現に関しては、駐日本大韓民国大使館千葉韓国教育院長、韓相美先生に御確認と修正の御指摘を頂いた。この場を借りて両先生には深謝申し上げます。

## 각주

<sup>1</sup> 이 글에서 한국이라고 말할 때, 식민지해방 전 시기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북한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가리킴.

<sup>2</sup> 일본의 근대 계몽사상이 확립되는 데에 그 단서가 된 자이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온 근대사상가가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다. 그의 사상은 한국에서 근대식 개혁이 실패로 끝난 갑신정변(1884)을 계기로 하여 그 전후에 사상적 입장이 변화된다고 한다. 즉 갑신정변 전까지 시기의 사상은 아세아 나라들, 특히 한국과 중국이라는 동아시아의 이웃 두 나라와 연대하여 그들을 근대화 시킴으로써 서양열강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끌겠다는 “흥아론(興亞論)”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갑신정변이 좌절되고 계획세력이 무너진 이후에는 한국에서 근대식 개혁을 시키려고 제휴할 짝을 잃었고, 청나라는 한국의 계획 세력을 막고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맡았듯이 동아시아에서 근대개혁에 대하여 뚜렷이 막아내보려는 처지에 있다고 밝혀졌다. 그러자 이전의 입장을 버려 바뀌어서 정체된 단계에 멈추는 중국과 한국을 개혁할 기도를 포기하고 문명 축의 서는 나라로

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맞서보면서 단독으로 근대화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탈아론(脫亞論)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후쿠자와의 사상 전환에 관한 개설적인 설명이며 후기 사상에서 내세워진 탈아론에서 아세아에 대한 침략주의적 성격을 띠게 된다고 평가되었다.

<sup>3</sup> 요네타니, 2006

<sup>4</sup> 야스카와, 2000, 강상중, 사이토, 스키타, 다카하시, 岩波書店2002

<sup>5</sup> 문 경수, 2015

<sup>6</sup> 요네타니, 2006, p157

<sup>7</sup> 나카노, 2001

<sup>8</sup> 강 상중, 2000, p94

<sup>9</sup> 요네타니, 2006, p4

<sup>10</sup> 나미키, 1999

<sup>11</sup> 고 석규, 2002

<sup>12</sup> 정 병욱, 2004

<sup>13</sup> 강 상중, 2001, 우에노 토시아/ 모우리 요시타카, 2000

<sup>14</sup> 냉전체제의 붕괴에 이르는 움직임들은 세계의 패권시스템이나 그것에 바탕을 둔 복지국가 체제의 흔들림이라든지 무너짐이라든지 하는 현상으로서 이미 “68년”에 의해 상징되는 시기에서부터 드러나 있었다. 70년대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페미니즘이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하는 기존질서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물결이 퍼지고 있었다.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세계질서의 재편성에 대응하며 자본주의에 관한 유효한 수정을 하려고 국가의 기능전환을 향하는 것이 Thatcher-ism을 비롯한 신자유주의들이며 90년대는 그러한 움직임이 강해진 시대라는 것이다(요시미 순야, 2001). Thatcher-ism의 특징은 국가에서부터 국민의 경제생활에 대한 영향력을 잘라 빼려고 함으로써 사회보험, 고용정책 같은 국민의 집합적 안전장치를 해체해간 반면에, 사회변동으로 인한 국민의 여러 불안들이나 잃어버려진 국민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며 사람들의 의식을 통합된 집합적(영국)국민의식으로서의 “영국다운 것”으로 돌려갔다. 90년대 일본의 정치·사회동향도 그러하게 국가주의와 맺어진 신자유주의에 해당되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sup>15</sup> 한국에서도 논쟁거리가 된 소위 “왜곡된 역사교과서”로 벌써 나와 있다.

<sup>16</sup> 그 결과로 그들이 근대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역사관을 가리켜 부르는 “自虐史觀(자학사관)”이라는 말 자체도 그들의 입장에 찬성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간에 급속히 퍼졌다

<sup>17</sup> 그러한 움직임은 일단은 정부 쪽의 제도적인 것이 아닌데도

꼭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생겨온 내셔널리즘 운동도 아닐 것이다. 정치 수준에서도 역사를 검토하려던 활동이 있었고 더군다나 그 활동에 참석한 이론가의 많은 부분은 상기한 교과서를 만들어 나서던 그룹에 참석한 이론가와 겹쳐 있다.

<sup>18</sup> 다카하시, 1999

<sup>19</sup> 이 운동은 주로 “위안부문제”를 무효화하기를 겨누는 것이며 역사인식 논쟁의 초점이 되었다. 80년대 말로부터 90년대에 이 국제환경의 변화는 - 냉전의 종언이라든지 아세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발언권의 증대라든지 개발독재형의 군사정권의 민주화라든지 - 일본의 전쟁책임을 숨겨온 요인들을 변화시켜, 거의 반세기에 걸친 기간에 ‘내부’에 달린 상태와 같은 일본인에게 망각해져온 전쟁. 식민지 지배의 기억이 눈에 띄게 하였다. 그런 일들 중에서 제일 극적으로 드러나게 된 일은 일본군의 “위안부”였던 군사적 성폭력의 피해자 여성이 증언한 일이었다. 그것으로 인해 일본정부, 그 정부를 정치적 대표자로 한 일본 국민이 과거의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의 호소에 맞서야 하게 되었고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쟁도 ‘위안부문제’가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수정주의의 주장에 의하면 ‘위안부’라는 성노예 제도는 없었고 그것은 장사행위, 매춘에 불과한 것이고 위안부였다는 여성들의 증언도 일본을 정신적으로 힘있게 하려는 세력에 의해 꼬드겨진 거짓말이라고 한다.

<sup>20</sup> 사카모토, 1998

<sup>21</sup> 요시미, 2001

<sup>22</sup> 니시오 칸지/후지오카 노부카츠, 1996

<sup>23</sup> 말할 바 없이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이 퍼 든 논리이다. ウォーラーステイン, “世界システム II”, 名古屋大学出版会, 2013

<sup>24</sup> 대표적인 논의로서는 헤겔(G.W.F. Hegel)이 그의 주저 “정신형상학(1807)”에서 논한 이른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들 수 있다.

<sup>25</sup> 윤 건차, 2000

<sup>26</sup> 정 태현, 1987, 양원태, 1991, 이 윤갑, 1998 참조.

<sup>27</sup> 접촉, 충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강 내희, 2002 참고

<sup>28</sup> 역사학계와 경제사학계 사이에서 전개된 ‘수탈론’과 ‘근대화론’의 논쟁(“식민지 근대화론 논쟁”)의 논점들에 대해서는 정 연태, 1999, 조석근, 1997, 김동노, 1998, 유재건, 1997, 정 태현, 1997 글들을 참조하였다

<sup>29</sup> 정 연태, 1999

<sup>30</sup> 1980년대에는 식민지 시기는 어떠한 사회 구성체였는가는 논점을 들고 퍼진 ‘식민지반봉건론’과 ‘식민지자본주의론’ 간

에 논쟁이 있었으며, 이 논쟁 역시 현재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시원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주로 어떻게 한국자본주의를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으며 논쟁의 핵심은 반본건의 문제였다. 1990년대 ‘식민지 근대화’를 둘러싼 논쟁은 ‘식민지반봉건론’을 주장했던 일부 경제사학자들이 ‘건제성장’론을 들고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정 병욱, 2004)

<sup>31</sup> 안 병직, 나카무라 사토루, “근대조선공업화의 연구 : 1930~1945년”, 일조각, 1993

<sup>32</sup> 안 병직, 1997

<sup>33</sup> 신 용하, 1998

<sup>34</sup> 안 병직, 1997

<sup>35</sup> 임 대식, 2000

<sup>36</sup> 강 상중, 2000

<sup>37</sup> 같은 지적은 나카노, 2001이나 문 경수, 2015의 논의에서도 산견된다.

<sup>38</sup> 그렇다고 경제성장론을 곧바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유는 글을 맺으면서 하겠다

<sup>39</sup> 김 진균. 정 근식, 1997

<sup>40</sup> 구미에서는 1978년에 Edward W. Said가 “Orientalism (Georges Borchardt Inc., New York, 1978)”을 발표한 이래, 구미국가들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역사 안에서 ‘orientalism’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지탱하고 강화시킨 것이 널리 인식되었다. 나아가서 ‘orientalism’, ‘식민주의’는 그저 역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아 현재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인식에 의해 구미열강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가 지배자와 피지배자 양쪽에 남긴 문제, 특히 문화. 사상 등의 측면에서 남긴 부정적인 유산을 밝히고 그것을 해체하고자 하는 문제의식들이 나타나 있다. 그것으로부터 탈식민주의 혹은 식민지 지배의 시대 이후의 과제를 밝히고자 하는 ‘post-colonialism’이라고 불리는 동향이 커져갔다고 할 수 있겠다. (모토하시, 2005)

<sup>41</sup> 윤해동, 2003

<sup>42</sup> 배 성준, 2002

<sup>43</sup> 강 내희, 2002

<sup>44</sup> 강 내희, 2002

<sup>45</sup> 객주23에서 언급한 워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 시각은 그런 분석 틀의 대표로 들 수 있겠다. 그에게 의하면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함의하는 것은 근대국가나 자본주의는 일국 단위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권국가로서의 근대국가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국가에 의해 승인받아야 주권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다. 자본주의도 국

제 분업체제로서의 세계시장 경제 안으로 세계 각 지역(국가나 아직 국가가 아닌 사회)을 끌어들이므로써 확대하는 것으로 일국 안에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로만 성립되는 것이다. 또 세계체제는 중심, 반주변, 주변이라는 구별을 내포한 국가간 체제로 구성되며 민족주의는 이 체제 안에서 중심 국가들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생긴다고 한다.

<sup>46</sup> 가라타니, 2010

<sup>47</sup> 객주23,44를 참조

<sup>48</sup> 이 진경, 2006. 이어질 후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핍볼 것이지만 불가능성의 성격을 띠는 영위의 예로서는 동일화와 모방, 침묵 등이 있다.

<sup>49</sup> 대동아 담론은 같은 대동아라고 관사冠辭가 쓰이는데도 발언 주체에 따라 서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공동이라든지 협동이라든지 하는 공통저말 유의한다.